청년정책조정위원회		
회 차		제4차(2021.8.26.)
안 건	번 호	제1호
	유 형	심의

대외주의

청년세대 “격차해소”와 “미래도약 지원”을 위한

청년특별대책

2021. 8. 26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청년정책 추진 방향 ····· 5

Ⅲ.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····· 8

1. 일자리 분야 ····· 9

2. 주거 분야 ····· 24

3. 복지·문화 분야 ····· 29

4. 교육 분야 ····· 36

5. 참여·권리 분야 ····· 40

Ⅳ. .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43

Ⅰ. 추진 배경

1 그간 정책추진 경과

□ **'18년 이후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 대책을 수립·지원**

* 청년 일자리 대책('18.3),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('19.7), 직업계고 취업활성화 방안('20.5)

○ **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, 인구감소** 등 **구조적 변화** 등으로 인한 **청년층 실업문제** 해소에 초점

* 청년 고용률(%) : (`17) 42.1 (`18) 42.7 (`19) 43.5 (`20) 42.2(코로나19 충격으로 감소)

○ **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**을 위한 **주거·교육·복지정책**도 **병행**

* (취업)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고용증대세제 신설, 중소기업 클린업 등
(주거)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, 청년우대 청약통장 및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도입 등
(복지) 청년저축계좌 신설, 햇살론 Youth 재출시 등

□ **청년기본법 제정**('20.3월)이후 1·2차 **청년의 삶 개선방안**, 1차 **청년정책 기본계획('21~'25) 수립**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**청년정책 확대**

○ **일자리, 주거, 교육, 복지·문화, 참여·권리** 등 5개 분야로 정책 체계화

*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: 일자리, 주거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포함 5개년계획
* '21년 시행계획 청년정책 308개(일자리 115, 주거 24, 교육 88, 복지·문화 50, 참여 31)

○ 청년정책 심의 기구인 **청조委**(위원장 : 국무총리) **구성**('20.9), 국조실 內 **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** 등 **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확립**

○ 청년이 **청년정책 수립 전과정**에 실질적으로 **참여·주도**할 수 있도록 **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** 등 청년참여거버넌스 구축 추진

□ **코로나 19로 인한 청년고용 충격에 대응**하기 위해 추경 등을 통한 **긴급대책 마련**

○ **고용충격 대응**('20.2월·3월·4월·9월, 경제중대본), '21년 1·2차 추경 등을 통해 청년구직자 등의 일자리 여건 개선 및 소득지원 강화

* (구직촉진)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확대, 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지원,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
(훈련) 내일배움카드 지원,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등
(생계안정) 구직급여 추가 확충,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

○ **한국형 뉴딜2.0**을 통해 **"청년희망사다리"** 사업을 **비중있게 반영**

* 청년 자산마련, 학비·채무부담 경감, 주거비 부담 완화, 고용 인센티브 강화 등

2 청년의 삶 여건

□ 청년취업기회가 **디지털화·자동화·로봇화** 등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산업구조 변화(비대면화 등)가 **가속화**되어 **더욱 어려움**

* 연령별 취업자 증감('19→'20) : (청년) **4.1→△18.3** (30대) △5.3→16.5 (40대) △16.2→△15.8 (50대) 9.8 →△8.8 (60세 이상) 37.7→37.5

○ 기업들도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입채용을 줄이고, 채용방식도 경력직·수시채용으로 변경, 청년 체감 채용기회는 가중적으로 감소

* 올해 2분기 채용계획이 있는 매출상위 500대 기업중 신입사원을 뽑은 곳은 62%(38%는 경력사원 채용), 이중 **수시채용이 37.3%**로 공채비중 감소(고용정보원, '21.6월)

□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은 교육, 주거, 정신건강 등 **청년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** 전이·확대되는 양상

○ 사회적 생존을 위한 **교육비(학자금 대출), 주거비(전·월세) 지출**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,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는 제한적

* 청년 채무발생 사유('20.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) : **주거비 마련(42.9%), 학자금 마련(34.1%), 생활비 마련(12.0%),** 창업자금 마련(7.5%), 기타(3.4%)

** 자산보유액 증감률(%): **29세 이하 △2.5**, 30대 8.7, 40대 3.7, 50대 3.2, 60세 이상 1.6
부채보유액 증감률(%): **29세 이하 8.8**, 30대 13.1, 40대 6.0, 50대 6.4, 60세 이상 1.1
↳'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

○ 따라서, 청년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상자산·영끌 **등에 몰두하는 상황**

□ **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** 불안감, 우울감 등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**토록 지원 필요**

○ **고용시장 지위 불안정, 소득·자산 격차 확대** 등 미래에 대한 **청년의 불안감**을 축소시키고, **코로나 장기화로 인한** 청년 정신건강 등 향상 필요

☞ 청년들이 **미래에 대한** "꿈과 희망"을 가지고 "미래세대의 주역"**으로 도약**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자립과 건강한 삶 지원

〈참고〉 청년의 목소리

❖ **(설문조사)** `21.7.23.~8.4. / 만 19~34세 청년 1,000명/ 온라인 설문조사
❖ **(댓글 이벤트)** '21.6.28.~7.12. / 청년정책 유튜브 댓글 이벤트

□ 청년정책 경험담

○ 대부분이 **청년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**하며, 경험한 청년정책 중 '**취업지원제도***'가 **가장 도움이 컸다**는 의견

* (예) 국민취업지원제도, 면접수당, 면접정장 무료 대여,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등

- 그 외 목돈 마련을 위한 **금융지원, 주거안정 지원, 교육·훈련 지원, 청년수당** 등 **생활비 지원**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

□ 정책 제언

○ **"몰라서 못 받는 일이 많다"**며 **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안내 요청 의견**이 **대다수** 차지

○ 청년정책 **지원 자격요건**(나이, 소득 기준 등) **완화** 및 **지원대상**과 **분야**를 **확대**해달라는 의견 제안, 지원정책 **신청절차 및 서류 간소화** 필요, **취약계층 청년 혜택 강화** 등으로 의견 표출

□ 분야별 정책의견

① (일자리 정책) 취업준비 시 **어려운 점**으로 **일자리 부족**(70.2%), 생계유지 병행(37%), 정보획득(32.8%), 대-중소기업 격차(29.8%) 순으로 응답

* ''지원기간이 너무 짧음', '좋은 일자리 연계지원 부족', '기업의 니즈와 맞지 않음'

② (주거 정책) 필요정책으로 **주택공급 확대**(65.7%), **대출 완화 등 금융지원**(65.5%), **거래비용 축소**(32.6%), **주거환경 개선**(32.3%) **순으로 응답**

* '전월세 자금 지원 지원범위가 너무 협소', '청년을 위한 주택의 양과 질 모두 부족', '정책기준 현실화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필요'

③ (복지·문화 정책) **가장 시급한 정책**은 **'저소득층 지원(33.8%)', 자산격차 완화**(31.2%)', **문화 향유기회**(17.5%), '**마음건강 지원**(17.1%)' 순으로 응답

* '자산형성지원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할 필요', '청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 미흡'

④ (교육 정책) **'전공-취업간 연계성(33.9%)', '학자금 부담(31.1%)'** 수도권-지방간 교육격차 완화(21.6%), 일학습 병행 어려움 해소(13.4%) 순으로 수요 높음

* '장학금을 받아도 학자금 부담 여전', '직무교육 부족으로 졸업과 취업간 공백기간 길어짐'

Ⅱ. 청년정책 추진 방향

1 추진 방향

◇ [3대 추진방향] ① 코로나 위기 극복 ② 격차 해소 ③ 미래도약 지원

① (코로나 극복)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 대응

- ‣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+ ‣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 바우처 신설 + ‣ 코로나 졸업반 지원 등 당면 어려움 해소 지원

② (청년내 격차 해소) 청년 세대내 격차 완화를 통한 공정한 출발선 보장

- ‣ 월세 특별지원 + ‣ 소득수준별 자산 형성 + ‣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자립에 기본이 되는 주거, 교육 등 격차 해소

③ (미래 도약 지원) 자생력을 바탕으로 권리의무 주체로서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역량 제고

- ‣ 미래대응 인재 양성 + ‣ 청년 주거안정성 제고 + ‣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+ ‣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

◇ [5대 분야] 일자리, 교육, 주거, 복지, 참여·권리 등 청년 세대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추진

○ (일자리)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“내일 찾기”를 응원하고, 구직, 재직, 창업 등 노동시장 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

○ (주거) 전·월세 등 “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”하면서, 청년들의 “내 집 마련”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

○ (복지·문화) 모든 청년의 “든든한 출발”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, 코로나로 인한 심리·정서적 회복 지원

○ (교육) 청년들이 “원하는 미래를 설계”할 수 있게 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, 신산업 등 청년 선호분야 역량개발 지원 확대

○ (참여·권리) 청년들이 “청년정책”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기반 강화 및 온-오프라인 전달체계 개선

2 추진 체계도

청년특별대책 목표

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

3대 방향 5대 분야

코로나 위기 극복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**14만명**+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수당**17만명**지원
- ❶직무교육+❷취업연계 장려금+❸후학습 장학금 **고졸청년패키지지원** 확대
- 코로나블루 **청년 심리상담바우처**(20만원*3개월) 별도 **신설** 1.5만명 지원

청년세대 내부 격차해소
- **국가장학금** 중산층까지(~8구간, 700만원~350만원) 지원**반값등록금 실현**
- 저소득 **주거취약청년** 15.2만명 **월세 특별지원**(20만원*12개월, 한시)
- ❶**청년내일저축계좌**+❷**청년희망적금**+❸**청년장기펀드** 자산형성 지원
- **지역**주도 **청년일자리** 사업 **개편** 및 **산업단지** 근무 **청년 교통비 지원** 연장

미래도약 지원
- **청년창업활성화3대패키지**(청년창업자금, 청년창업펀드, 태크스타보증)지원
- **청년우대형청약통장** '23년까지 **연장** 및 **40년 만**기 고정금리 **정책모기지** 도입
- **장병사회복귀준비금** 정부매칭(250만원)으로 목돈마련 지원 (**최대 1천만원**)

일자리

"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 개선" (80만명+@ 취업지원)

❶민-관협력, 기업고용의 인센티브 강화
❷구직·취업·창업 등 단계별 맞춤 정책 확대
❸공공+민간부문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

주거

"24만명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주택 5.4만호 공급"

❶취약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
❷청년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
❸내집마련 초기 부담 완화 및 지원

복지

"35만명 자산형성 지원 문화누리카드 31만명 지원"

❶소득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
❷취약 청년 자립 지원 강화
❸청년층 정신건강 및 문화생활 향유지원

교육

"56만명 등록금 부담 경감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"

❶반값등록금 실현 및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
❷대학 비진학 청년 역량개발 및 취업지원
❸미래대응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

참여 권리

"정부위원회 20%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전달체계 연계 강화"

❶청년-정부 간 소통 등 정책참여 기회 보장 ❷법령, 정책연구 인프라 등 청년정책 기반강화

"청년 누구나 동등한 삶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보장"

Ⅲ.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

1 일자리 분야

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률 회복 지원

◇ **민-관 협력 강화 → "민간기업" 중심의 청년 일자리 확대**
◇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 반영 → **청년의 취업 및 일경험 지원**

1. 경쟁력 있는 청년 일자리 확대 (21.하반기)

1 수요창출형·맞춤형 청년 일자리 확대(21.하)[국조실·관계부처]

○ (신설) **정부내 TF**를 구성, 경쟁력 있는 **일자리 창출**을 위한 기업과의 **민·관 협업모델 구축** → 참여기업·단체 확대 등 **사회적 분위기 확산**

- **주요기업 훈련기관**을 통한 **교육·훈련 후,** 기업 **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**하는 정책 병행 등('21.하)

2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대폭 정비(21.하)[기재부·교육부·과기부·고용부]

○ (개선)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 수요가 많은 **IT·AI 디지털 분야**, **Green·Bio** 분야 등의 **청년인력 양성체계 대폭 혁신 추진**(21.하)

- 기업이 선발·교육하는 OJT 중심 현장실습형 훈련과정인 **벤처·스타트업 아카데미**를 운영(21.하반, 0.5만명), 정부가 훈련비 등 지원

- **빅데이터, 게임분야** 선도기업-훈련기관간 협업을 통해 기업맞춤형 구직자 훈련을 제공(디지털선도기업 아카데미, '21.하반, 0.2만명)

- 지역 산업계, 지역기업, 대학·훈련기관이 연계하여 **지역기업수요**에 **맞춘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비** 지원('21.하반, 0.3만명)

3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(21.하)[중기부, 과기부]

○ (개선) **미래비전 분야**(IT, AI, 블록체인, 에너지, Bio)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 창업시스템 혁신 및 **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** 추진('21.하)

- 청년 개발자가 **스타트업 현장 경험**을 통해 **숙련 개발자**로 성장하는 **SOS(Star of Startup) 개발자 프로젝트** 운영('21.하, 100명)

- **청년**(학력·전공 무관, 29세 이하) **스타트업 맞춤형 인공지능 개발자 집중양성과정**인 **이어드림 프로젝트** 신설('21.하, 100명)

* 인공지능 관련 4대분야(게임·금융·유통·바이오)로 구분하여 세부교육과정 운영
인공지능 관련 교육역량을 가진 구글, MS 등 글로벌기업 및 국내기업 개발자를 강사로 섭외

2.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

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(14만명, 고졸자 포함)고용부

○ **(현황) 주요 청년채용 장려금 사업***이 **'21년 종료예정**으로 **청년실업 장기화 상황**을 감안,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

* 청년추가고용장려금('21년 9만명),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('21년 5만, 1차 추경 +6만) 등

○ **(신규) 중소기업**(미래 유망기업, 5인 이상)의 **청년채용을 촉진**하기 위해 **"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('22~'24년)" 사업을 신설, 14만명 취업 지원**

*청년(고졸(18~23세) 청년 2만명 포함)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年 최대 960만원 지원

2 민-관 협업 중심 "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" 신규 추진고용부

○ **(현황)** 최근 **수시·경력직 채용의 확대**로 **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** 청년층의 **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가중**

* ▲채용 시 평가항목 중 **'직무역량' 비중 52.1%**('21.2월 사람인) ▲수시 채용시 중요한 역량: **직무관련 경험(47.4%), 직무 관련 지식(15.8%)** 등('21.2월 진학사)

○ **(신규) 민관 협업***을 통해 청년에게 현장형 **직무훈련, 일경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**하고 청년이 **공감할 수 있는 채용문화 확산** 추진

* (기업)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(직무훈련, 일경험 등) 추진
(정부) 모집·취업 연계 및 프로그램 추진비용·인프라 등 지원

** ('21년) 기존사업(K-Digital 트레이닝, 국취 일경험 프로그램 등) 요건충족 시 운영비 지원
→ ('22년)「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」신설

< 참고2: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>

1유형(직무훈련)	▲취업준비생 대상 역량향상 교육 제공
2유형(일 경 험)	▲취업전략 컨설팅, 직무체험, 인턴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
3유형(채용연계)	▲대기업 인프라 활용 교육 제공, 협력사 인턴·취업
4유형(청년공감)	▲구체적 채용정보 명시, 면접전형 상세결과 등 공개, 현직자와 소통기회 마련 등
5유형(기업자율)	▲기업별 특성 및 인적·물적자원 등을 고려한 창의적 지원 프로그램 발굴·추진

3 청년 고용시 "고용증대 세액공제" 적용 확대(일몰연장)[기재부]

○ **(현황)** 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**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***가 **금년 말 종료 예정 → 기업의 청년고용 유인 감소 우려**

* 청년 고용증가 1인당 일정금액(중기 1,100~1200만원)을 3년간(대기업 2년) 세액공제

○ **(확대)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**을 위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**3년 연장**(~'24.12.31.)하고 **비수도권 지역 공제금액도 100만원 인상**

청년 고용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

중소기업 (3년간)		중견기업(3년간)		대기업(2년간)	
수도권	수도권 外	수도권	수도권 外	수도권	수도권 外
1,100만원	1,200 → **1,300만원**	800만원	800 → **900만원**	400만원	400 → **500만원**

4 청년 고용시 중소기업 "사회보험료 세액공제" 적용기한 연장[기재부]

○ **(현황)** 중소기업의 **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**에 대해 **100%(2년간) 세액공제를 적용**하고 있으나, **금년말 종료** 예정

○ **(확대)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, 사회안전망 강화**를 위해 **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** 제도의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4.12.31.)

3. "구직청년" 의 다양한 취업 기회 확대

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추진(2.6만명)[행안부]

○ **(현황)** 청년실업 해소 등 **지역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**('18~'21)이 금년 말 **종료예정 → 지역고용 악화 우려**

* ('20년 성과) 참여청년 63% 정규직 전환, 참여청년 76% 창업 성공, 일경험 청년 64% 취업

○ **(개편) 지자체 수요**를 반영, **혁신·상생·포용 등 지역주도형 발전, 사회적 가치 확산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**사업으로 **개편***하여 사업 **추진**('22년 2.6만명)

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주요내용(안)

구분	지원 내용
지역혁신형	지역특화,혁신분야 일자리 지원(인건비 1년+근속시 1년+3년차 정착 인센티브)
상생기반대응형	지방소멸위기지역 창업(인큐베이팅 1년+창업시 1년+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 1년) 지역특화 창업청년 지원(성장지원 1년+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 1년)
지역포용형	지역사회공헌 연계 일자리 지원(인건비 1년)

2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[고용부]

○ **(현황)**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**청년고용의무제***가 **금년 말 종료 예정** → 종료 시 **청년들의 취업 어려움 가중 우려**

* 공공기관에게 매년 정원의 3%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(15세~34세) 고용의무 부과

○ **(확대) 청년고용의무제**의 **유효기간**을 '23년말까지 **2년 연장**하여,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보장('21.하)

*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'21.8)

3 해외 취업 지원 확대[고용부]

○ **(현황)** 그간 **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**은 여전히 높지만,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**해외취업 지원사업***을 **축소 운영**

* 지원내용: ▲일자리 맞춤형 교육제공 및 해외취업 연계 ▲민간해외취업알선, ▲해외취업정착지원금(1인당 신흥국 6백만원, 선진국 4백만원) 지원 등

** 인원(명): ('19년) 8,900→ ('20년) 7,750→('21년) 7,682

○ **(확대)** 청년들의 해외취업 선호 및 개선된 해외 취업여건을 고려, **코로나19 이전 수준**으로 **사업규모 점진적 확대**

4 인공지능·비대면 분야 일자리 기회 창출[과기부 · 문체부]

○ **(현황)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청년 취업기회 확대**를 위하여 **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*** **구축·공개, 콘텐츠 산업**** **발굴 지원 중**

* 데이터 구축 전과정에 직접고용 창출 + **국민참여형** 크라우드소싱 방식 도입, 청년 16,221명(42%) 참여

** AI,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, 청년 콘텐츠(문화자원 활용의 차세대 융복합·게임·음악 등) 제작 지원 및 활성화('21. 349억)

○ **(확대)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**를 위해 **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**를 **확대 구축***('21년 190종→'25년 1,300종)하고, **비대면 콘텐츠 산업**** **지원 강화**

*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: ('21년) 190종 → ('25년 누적) 1,300종

** 비대면 콘텐츠 산업: ('21년) 65개 과제 → ('22년) 85개 과제

4. “중소기업 취업청년” 소득 및 생활 지원

◇ ▲교통비 지원 + ▲소득세 감면 + ▲자산형성지원 + ▲전세 자금 지원 등으로 실질소득 증가 ⇨ **대기업 취업자와 격차 완화**

1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사업 연장(14만명)산업부

○ **(현황)** 교통여건이 열악한 **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생활편의 제고**를 위한 **산단 근로청년 교통비 지원사업**이 **금년말 종료 예정**

* 산단 중기 청년근로자 교통비(월 5만원) 지원(매월 1,010개 산단 청년 16만명 지원)
* 교통비 지원 산단기업의 일자리 창출(+0.5명), 고용유지율(+5%p) 효과 확인('17.7~'20.6월)

○ **(확대) 1년 한시적**으로 **사업 연장**(지자체 20% 매칭 지원, 14만명)

2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90%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기재부

○ **(현황) 중소기업 구직난 및 청년실업 해소** 위한 **청년 취업자**에 대한 **90% 소득세 감면**(5년간)* 금년말 **종료 예정**

* 장애인, 60세 이상인 자,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의 70%, 3년간 감면

○ **(확대)** 현행 **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**(~'23.12.31.)

3 [신규 취업청년]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(36.7만명)고용부

○ **(현황)**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**성과·수요*를 고려**한 **지원**과 함께 **지속가능성 확보 필요**

* ('20년 성과) 일반중소기업 취업청년보다 1,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%p 높음
'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목표(신규 10만명)가 旣 조기마감(8.6)
* 지원내용 : 2년간 청년(300만원)+기업(300만원)+국가(600만원) → 만기시 1,200만원 수령

○ **(확대) '22년** 신규 7만명 등 **36.7만명***에 대한 **자산형성 지원을 지속**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합리화 등 **제도개편****을 **병행**하여 **제도 내실화** 추진

* 지원규모: ('21년) 신규 10만 등 35.2만 → ('21년 추경) 추가 2만 → ('22년) 신규 7만 등 36.7만
** 중견기업 지원 제외, 기업 자부담 점진적 확대 등

4 (6개월 이상 재직청년)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확대(13.5→15.5만명)중기부

○ **(현황)** 청년근로자의 **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** 및 **자산형성 지원**을 위한 **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** 금년말 **종료 예정**

* 5년간 청년(720만원)+기업(1,200만원)+정부(1,080만원) 적립 → 만기시 3천만원 수령

○ **(확대) 재직자 내일채움 가입기한을 1년 연장**('22년말)**하고, 지원 규모도 확대**('21년 13.5→'22년 15.5만, 누적)

- 만기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**소득세 감면율**도 인상
(중소기업 : 50%→90%, 중견기업 30%→50%)

5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연장(~'23년 12월)국토부

○ **(현황)**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**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용 저금리 전세대출*** 지원은 금년말 종료 예정이지만, **정책수요 지속 발생**

* (대상주택)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, (대출한도) 1억원, (대출금리) 연 1.2%

○ **(확대)** 운영기한을 **'23.12월까지 2년 연장**하고, **연령기준 조정***을 통한 **지원대상 확대, 제도개선****도 **병행** 추진

* 연령기준을 "출생일→ 출생연도"로 조정, 졸업직후 취업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 가능

** 이사 등 전세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(`21.8월~)

사례 :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A씨가 받는 혜택

☞ **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(50인 미만)**에 신규 취업하여 **2,793만원 연봉**(中企 대졸 초임 평균)을 받는 경우, **年 663만원+α 수준** 실질소득 증가
⇨ 중기 취업자 실질소득이 **대기업 수준**에 근접

소득 지원	자산형성 지원	주거비 지원	교통비 지원	합계
45만원 (소득세 감면)	468만원+α (내채공+희망적금)	90만원 (중기청년 전세대출)	60만원 (산단 근로청년 교통비 지원)	**663만원+a**

* 대졸 초임 年임금(만원, '21 잡코리아) : (대기업)약 4,121 (中企)약 2,793

5. “진입준비 청년” 취업 역량 및 일경험 지원 강화

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 확대(15만→17만)고용부

○ **(현황) 재산기준, 취업경험 요건** 등으로 일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**지원*** **대상에서 제외**되는 정책 사각지대 발생

*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 * 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

○ **(확대) 청년 재산기준 상향, 선발형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 폐지** 등 **지원요건**을 **완화***('21.하), **지원대상도 확대**('21년 15만명→'22년 17만명)

* (종전) 재산 3억원 이하, 2년이내 100일(또는 800시간) 미만의 취업 경험
(개선) 재산 4억원 이하, 소득·재산요건 충족시 취업경험 여부 무관 신청 가능

** '22년 국취 청년 1유형(구직수당)+2유형(취업활동비 지원) 지원인원 : 25만명

2 구직단념 청년(니트)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(0.5만→0.7만)고용부

○ **(현황)** 취업의욕이 저하된 **구직단념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**은 **일부지역**(인천, 부산 등 14개)**에서만 시행**되어 **참여가 제한적**

* ❶구직단념청년 발굴 → ❷사회활동 의욕고취를 위한 맞춤형(2~3개월) 프로그램 제공(이수시 20만원 지원) →❸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,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

* **(구직단념청년)**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인 청년(만18~34세)

○ **(확대)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, 대상**(자립준비청년 추가)**·인원도 추가**('21년 5천명 →'22년 7천명)하고 **지역 청년센터와 협력**하여 구직단념 청년 발굴 및 구직의욕 고취

사례 :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(중위소득 60%)가 받는 혜택

☞ 구직의욕 고취 → 취업역량개발 → 취업성공(1년 장기근속)시
최대 **“470만원+α” 수준 실질소득 증가 + 기타 취업지원.일경험 서비스**

구직의욕 고취	⇒	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	⇒	취업성공
청년 도전지원 프로그램 이수 (2~3개월)		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		취업 성공+근속
이수 인센티브 20만원		*** 소득·재산 요건 충족시 구직촉진수당 300만원**		**취업성공수당 150만원**
자치단체 (청년센터)		고용센터		고용센터

3 청년 구직자 취업-코칭 솔루션 지원 신설[고용부]

○ **(현황)** 기업 및 직무 정보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, 현재 대다수 청년 구직자는 **사교육 시장에 의존**하여 **구직정보를 취득**하는 상황

○ **(신규)**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**실제 직무역량을 준비**할 수 있도록 **청년 구직자 취업-코칭 솔루션 지원사업 신설**

* ①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, ②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-멘토링 및 모의면접, ③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 지원

4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개편[고용부]

○ **(현황)** 그간 **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**(견학, 회사소개 등)을 통해 청년에게 우수 **중소·중견기업 정보를 제공**해왔으나 **다양한 수요 반영 미흡**

* 참여인원: ('17)10,492명→ ('18)10,229명→ ('19)10,119명→ ('20)7,804명

○ **(개선) 청년수요를 반영,** ①미니인턴 실습(최대 2주, 프로젝트 참가), ②모의면접 기회 제공, ③실전면접을 통한 채용 연계 등 **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개편**

5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(5.7만→9.9만)[고용부]

○ **(현황)** **K-Digital Training***을 통해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·역량 개발을 지원중이지만 **기업수요 대비 인력 공급규모******는 부족**

* 멋쟁이사자처럼 등 청년선호 민간혁신 IT 훈련기관이 참여, 네이버 등 디지털 선도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지원→실제 직무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 제공, 국비지원 사업

**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약 3만명 인력 부족 예상(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)

○ **(확대)** 현장의 **SW 인력수요 증가를 고려**하여 **K-Digital Training*** 및 **K-Digital Credit**** **확대**('21년 본예산 5.7만명 → 22년 9.9만명)

* K-디지털 트레이닝: ('21년) 1.7만명 → ('21년 추경) +0.7만명 → ('22년) 2.9만명

** K-디지털 크레딧 : ('21년) 4만명 → ('21년 추경) +2만명 → ('22년) 7만명

6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[고용부]

○ **(현황)**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**일경험을 제공** 중이나, 현장에서는 **청년들이 주로 대기업 등 기업에 참여하기를 선호**

○ **(개선)** 일경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**수도권, 일반직종 중심**으로 **대기업이 참여**하는 **훈련연계형 시범사업*** **확대**('21.하)

* 기초교육-직무체험 결합 일경험과정 마련, 국취참여자 자격·역량 등 감안하여 적합자 연계

** 지원규모: ('21년) 2.9만명 → ('21년 추경) +1.4만명 → ('22년) 3만명

7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[고용부]

○ **(현황)** 구직자에게 **국민내일배움카드**를 발급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, **졸업예정자**(대학교 4학년) **外 재학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**

* (대상) 15세 이상 구직신청한자(대기업 재직자·공무원·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등 제외)
(내용) 5년간 300만원~500만원 훈련비 지원

○ **(확대)** 빨라진 취업준비 시점을 감안, **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**을 위해 **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를 대학 4→3학년까지 확대('21.하)**

*****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

8 이공계 청년 대상 산업수요 기반 교육·훈련 확대[과기부]

○ **(현황) 이공계 청년의 취업난**과 산업계의 전문인력 부족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**산업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**을 **제공** 중

* (학사) 6개월 간 기업 등 연수, (석·박사) 9개월 간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과제 등 참여

○ **(확대) 청년 일자리 창출**을 위해 **특화 교육훈련 인원 확대**

* ('21년)1,300명(학사 1,100명, 석·박사 200명) →('22년)1,485명(학사 1,200명, 석·박사 285명)

6. “창업을 꿈꾸는 청년” 창업 全단계 체계적 지원

1 창업 초기 : 아이디어 발굴, 멘토링 지원 강화

1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중기부

○ **(현황)** 창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**업력**(예비, 초기, 도약) **기준**으로 **단계별 지원체계 운영** 중이며, **창업 준비 청년 수요 많음**

○ **(신규)** 과거 **창업경험이 없는 20대 청년**(만 29세 이하)만 **신청**할 수 있는 **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*** **제공**('21.하)

- ▲**사업화자금**(예비창업자 400명, 각 1천만원, 업력 1년 미만 초기창업자 100명, 각 2천만원), ▲**선배 창업가 멘토링**, ▲**세무.회계 등 교육** 지원

2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제공 중기부

○ **(현황)** 청년 창업자의 **우수 기술·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 중***이나 **자금지원 확대 요구 지속**

* 대출한도: 연간 1억원 이내, 대출기간: 10년(시설자금), 6년(운전자금), 대출금리: 2.0%

○ **(확대) 사업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**하여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

* 지원규모: ('21년) 1,600명 → ('21년 추경) +500명 → ('22년) 2,000명 수준

3 지역 청년대상 전문가 멘토링 및 창업상담 기회 제공 중기부

○ **(현황)** 지역의 **청년 예비 창업가**들은 **정보공유·경험·네트워크 부족**으로 **창업준비 및 사업화**에 **어려움** 경험(21.3~5월, 간담회 결과)

○ **(신규)** 창조경제혁신센터를 **지역 청년창업의 출발점으로 개편,** 유스데이,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**검증된 전문가 멘토링** 및 **창업상담 기회 제공**

* ▲(유스데이) ①기업경영, ②ICT, ③제조, ④지역기반으로 구분하여 전국 17개 창경센터가 동시에 전문가 공개멘토링 실시(매주 목요일)

* ▲(헬프데스크) 17개 시·도 창경센터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창업 전반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1:1 상담 데스크 운영

4 농업분야 청년창업 지원 확대[농식품부]

○ **(현황)** 농지확보·시설구축 등 높은 **초기비용**과 **영농기술 부족, 경영부담**은 청년의 농업분야 **창업에 어려움**으로 작용, **지원 확대 필요**

○ **(확대) 지역특화형** 임대형 **스마트팜 3개소 추가 조성**, 스마트팜 **영농교육(20개월, +100명)** 및 **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+200명)을 확대**하여 초기진입 지원

* 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: ('20~'21년) 기존 2개소 → ('22~'23년) 신규 3개소
②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: ('21년) 500명 교육, → ('22년) 600명 교육
③ 영농정착지원(3년간 최대 월 100만원 지원) : ('21년) 1,800명 → ('22년) 2,000명

5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 지원[과기부]

○ **(현황)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**을 발굴하여 국내외 **시장중심 창업탐색교육, 시제품 제작** 등을 지원중이며 성과*를 고려, **사업확대 필요**

* 5년('16~'20년) 간 창업탐색팀 319개 지원 → 159개 창업기업 설립, 856명 신규고용, 715억 원 투자 유치('21.3월말 기준)

○ **(확대)** 주관기관(6개大) 권역별로 **협력기관**을 추가 확대 지정(대학·출연(연) 등, 권역별 3개 내외)하여 **권역별 창업탐색교육 활성화** 지원('21.하)

사례 : 청년창업가가 받는 혜택

1 **예비 창업가 :** ▲사업화자금 1천만원 + ▲융자 자금 **1억원** + ▲**세금부담 "0"원** + ▲**선배 창업가 멘토링** + ▲**세무.회계 등 교육**

2 **초기 창업가**(업력 1년미만) : ▲사업화자금 2천만원 + ▲융자 자금 1억원 + ▲**세금부담 "0원"** + ▲선배 창업가 **멘토링** + ▲**세무.회계 등 교육**

3 **재도전 창업가 :** ▲사업화 자금 **6천만원** + ▲융자 자금 **1억원** + ▲**세금부담 "0원"** + ▲**교육·멘토링**

2 창업 후 : 금융 및 사업서비스 지원 강화

1 청년 창업기업 전용 '테크스타 보증' 지원 중기부

○ **(현황)** 청년창업가의 도전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**청년창업기업** (창업 후 5년이내 기업 & 경영주가 만 39세 이하) **우대 지원**

* 청년창업기업 전용 기술평가모형 적용, 보증비율 85% → 95% 상향, 0.3% 고정 보증료율 적용, 우대프로그램 적용 한도 3억원 이내(산정특례 최대 1억원 포함)

○ **(신규) "테크스타 보증"을 신설,** 정부창업지원 참여기업 중 **성과가 우수한 청년스타트업**은 **우대보증 신규지원**(2천억원 규모) 등 우대 강화('21.하)

현행 제도와 신설 '청년 테크스타 보증' 비교

구 분	현 행 (일반 청년창업기업)	신 설 (청년 테크스타 보증)
보증비율	95% (1년 미만은 100%)	**100%**
보증료	창업 5년 이내 3억원까지 0.3% 고정	창업 5년 이내 **5억원**까지 0.3% 고정
보증한도	3억원(산정특례 최대 1억원 포함)	**6억원**(산정특례 최대 2억원 포함)

2 청년 특화형 TIPS 운영사 신규 선정 중기부

○ **(현황)** 현행 TIPS 프로그램은 **일반 창업기업을 대상**으로 하고 있어 **스타트업 등 청년 창업기업 특화 자금 지원 미흡**

* 팁스(TIPS) : 민간 투자사(운영사)가 고급기술 창업기업에 先투자(1~2억원)· 보육·추천하면, 정부가 R&D 및 사업화자금 등을 매칭하여 지원

* (R&D) 2년간 최대 5억원, (창업사업화/해외마케팅) 1년간 각각 최대 1억원

○ **(신규)** 역량 있는 **청년 스타트업을 발굴**하고 **지원**하는 **특화형 팁스 운영사를 신규 선정**('21.하~)하고, **팁스 운영사**도 확대 운영

* ▲팁스 운영사 선정현황(누계) : ('20) 58개사 → ('21) 67개사
▲팁스 신규 지원 규모 : ('21) 400개사 → ('22) 500개사 수준

3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으로 청년창업기업 투자 유치 지원 강화 중기부

○ **(현황) '21년 1천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*** 결성 중이나, **청년 창업펀드에 대한 수요 지속**

* 대상 : ①대표이사가 만 39세이하 혹은 ②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% 이상인 청년 창업기업에 전체 펀드결성액의 60% 이상을 투자

** '13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청년창업펀드 65개 조합, 14,000억원 규모 펀드 결성

○ **(확대) '22년 청년창업펀드 1,000억원 추가 조성 통해 지원 강화**

* 지원규모 : ('21년) 청년창업펀드 1,000억원 조성(모태 600억원 출자) →
('22년) 청년창업펀드 1,000억원 추가 조성(모태 600억원 출자)

4 청년 지식재산(IP) 및 콘텐츠 금융지원 강화 특허청, 문체부

○ **(현황) 지식재산, 콘텐츠 관련 청년기업** 등은 물적 담보 부족, 낮은 신용도로 금융권으로부터 **자금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**

○ **(확대) IP 금융지원 확대** 및 **문화계정 투자펀드 추가조성 등*** 통해 **창업초기 청년·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**

* ▲(IP) IP 가치평가 비용지원 확대, IP담보회수 지원 등
▲(콘텐츠) 모험투자펀드, 코로나19 피해 콘텐츠기업 재기지원펀드 등 추가 조성('25년까지 1조 원)

** 문화투자펀드 지원규모: ('21년) 2,150억원 → ('22년) 2,200억원

3 재도전 지원 및 창업 인프라 강화

1 청년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 지원 '청년 다시-Dream 프로그램' 중기부

○ **(현황)** 성실실패 경험이 있는 (예비)재창업자를 선정하여 재창업 성공을 이끄는 **재도전 성공패키지**를 추진 중

*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자 청년비율 : ('18) 25% → ('19) 23.9% → ('20) 34.5%

○ **(신규)** 청년 재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**청년 전용 패키지식 집중 지원 프로그램 신설***

* 유망 아이템 보유 (예비)재창업자 전용 교육·멘토링, 사업화 자금(최대 6천만원) 등

2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[기재부]

○ **(현황)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**를 위해 **금년 말 종료 예정**인 **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필요**

○ **(확대) 청년 창업 활성화**를 통한 **일자리 창출**을 **지원**하기 위해 **적용기한**을 **3년 연장**(~'24.12.31.)

<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·법인세 세액감면 내용 >

	일반 창업	청년 창업
수도권과밀억제권역	-	5년간 **50%** 감면
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	5년간 **50%** 감면	5년간 **100%** 감면

3 창업인프라-정주여건 개선이 결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[중기부]

○ **(현황)** 지역 친환경 창업거점 사업인 **그린 스타트업 타운*** 사업의 **확대**를 통해 **지역 경제 및 창업 동시 활성화 필요**

* 영국 킹스크로스역과 같이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창업인프라, 주거·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이 결합된 그린·디지털 분야 복합창업거점 조성사업

* 1차 지역(충남 천안) 조성 진행('20년~), 신규조성지(광주광역시) 선정 및 설계용역 추진('21.5월~)

○ **(확대)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속 추진**

* 지원규모 : ('21년) 1개소(천안) 조성비 14,500백만원, 1개소(광주) 설계비 500백만원

4 일자리연계형 주택과 청년창업사관학교 복합개발 추진[국토부]

○ **(현황) 청년 창업인 대상 일자리연계형 주택**을 공급 중이나, 주로 **창업 공간**(코워킹스페이스, 공용회의실 등) **지원에 집중**

○ **(신규)** 청년창업사관학교*와 복합개발을 통해 **주거·창업 공간 조성 및 창업 교육·기술 등 패키지 지원** 추진('21.하 LH-중진공 업무협약 추진)

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청년 창업자를 발굴, 사업계획 수립, 사업화까지 창업 전 단계를 지원(전국 18개소 운영 중으로 일자리연계형 주택에 이전, 확대 추진)

7.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

1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, 현장 지원[고용부]

○ **(현황)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정채용 원칙이 확립**되고, 서류-필기-면접 등 채용단계별 **평가도구 개발*·보급**을 확대 중**

* 전체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소분류 257개 채용분야 중, 103개 채용분야 개발 완료('20.7월말)

** NCS 홈페이지를 통한 능력중심 채용모델 가이드북 제작·배포,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등

○ **(확대)** 자율적으로 **직무능력 기반 채용**을 할 수 있도록 **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능력중심 채용 모델 확산**

* 채용모델 추가 개발(4개), 중소기업 200개 대상 밀착형 채용 컨설팅 등 지원

2 다수 청년 종사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[고용부 · 문체부 등]

○ **(현황)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**을 위해 노무제공의 기본원칙* 등 반영한 **직종별 표준계약서**(現 17개)**의 보급 지속 확대** 필요

* 업무내용·보수지급방식 등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사항, 불공정거래행위 금지·부당한 처우 금지 등

○ **(확대) 택배기사 표준계약서**를 **제정**('21년 하반기~)하고, **MCN 등 청년선호 직종*별 표준계약서 정비 및 추가 개발** 추진('21.하)

* (예시) <문화> 방송(스태프, 작가 등), 애니메이션 분야 등

3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[권익위]

○ **(현황)**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**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추진단***(금년말 종료 예정) **운영** 필요

*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·제도개선 실시 및 채용비위 신고 접수·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조직('18.9~'21.12)
(현재 공공기관 공정채용 여부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 실시(7.20~11.30) 중)

○ **(확대)** 채용비위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**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추진단 운영 연장*후 필요시 정규 조직화 추진**

* 「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국무총리 훈령)」 개정

2 주거 분야
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성 강화

◇ 월세 한시 특별지원(15.2만명) 신설, 월세 무이자 대출 등 → 주거비 부담 완화
◇ 주택공급(5.4만호) + 청년우대 청약통장 → 주거안정성 강화

1.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

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(月 20만원, 15.2만명) 국토부

○ **(현황)**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에도, **주거급여 대상*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**은 **정책의 사각지대**에서 소외

*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: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5% 이하, 만19~29세

○ **(신규) 중위소득 60%이하* 만19~34세 청년** 대상으로 **최대 월 20만원**** (12개월)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사업을 한시 추진('22.上 착수)

* 소득기준 :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100% 이하 &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 60%이하
(혼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 →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60%이하)
**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 / 주거급여 수령자는 급여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

2 [수급가구]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(3.1→3.3만명) 국토부

○ **(현황)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**의 **신청연령 기준이** 日 **단위**여서 신청일 당시 **만19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**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* 동 사업 연령기준은 ①민법상 성년기준, ②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보장가구 기준 고려 →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결정

○ **(확대) 만19세 연령기준**을 출생일에서 **출생연도로 조정,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**(중위소득 45→46%) 및 **기준임대료 현실화***를 통해 청년지원 강화

* (예시) 서울 1인 청년 기준 월 최대 31만원 → 32.7만원 지원

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주거급여 (중위 46%)	'21년	82만2524	138만9636	179만2778	219만4331	259만0818	298만2871
	'22년	**89만4614**	**149만9639**	**192만9562**	**235만5697**	**277만1277**	**317만7222**

3 (5000만원 이하) 청년 월세대출 지원 강화[국토부]

○ **(현황) 현행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신청자격과 혜택이 제한적**

* (연소득) 2천만원 이하인 만34세 이하 청년, (대출금리) 월세 연 1.0%, (대출한도) 월 40만원(월세)

○ **(확대)** 많은 청년이 저렴하게 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**소득기준 상향**(연 2천만→5천만), **무이자대출**(월20만원 한도) 등 **지원 강화**('22.1월~)

	현재	개선	비고
신청대상	연소득 2천만원 이하	연소득 5천만원 이하	소득기준 완화
대상주택	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 주택	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	대상주택 확대
금리	보증금 1.3% 월세금 1.0%	보증금 1.3% 월세금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20만원 초과분 1.0%	보증금 0.1%p 인하 무이자 지원 신설
한도	보증금 3,500만원 월세금 월40만원	보증금 3,500만원 월세금 월50만원	

4 (7000만원 이하) 청년 전·월세 대출 공급 확대[금융위]

○ **(현황) 연소득 7천만원 이하*,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 청년**에게 **저금리****로 **소액 전세보증금·월세를 지원** 중이지만, **지원 수요 지속**

* 대출자 중 35.2%는 학생·취준생 등 무소득자 ☞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큼

** 청년 전월세 대출금리(2.08%)는 일반전세대출(2.63%)보다 평균 0.55%p 낮은 수준

○ **(확대) 공급규모 제한**(총 4.1조원)을 **폐지**하고, **1인당 대출가능금액을 확대**(7천만원→1억원*)하여 **청년 주거 지원 강화**('21.하)

* 대출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**약 5천여명(약 4천억원)의 청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**으로 기대

(☞ `20년에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)

2.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보유 지원

1 청년주택 5.4만호 신규 공급[국토부]

○ **(현황)**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**학교·직장 인근에 부담가능한** (시세 50~95% 수준) **청년주택**을 **'21~'25년 총 24.3만호 공급 추진 중**

○ **(지속) 전세임대 5천호 추가공급**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등 **'21년 공급목표 5.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**하고 **'22년에도 5.4만호 공급**

2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자가주택 신규 공급[국토부]

○ **(현황)**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**분양가 납입부담**으로 인해 **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은** 분양을 통한 **주택마련 기회가 제한적**

○ **(신규) 무주택 청년** 등에게 보다 **저렴한 가격**으로 분양되는 **공공자가주택 신규 도입 및 공급** 추진('21.하)

* 3기 신도시와 2.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(지구계획변경 등) 등 추진('21.하)

공공자가주택 유형 및 공급계획

구분	유형별 개요	공급계획
이익공유형 분양주택	일반 공공분양의 **80% 이하 가격**으로 분양, 처분 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**처분이익 공유**	**3기 신도시(17.3만호) 등 지구별** 공급물량의 **5~10%**, **2.4대책 사업지구** 공급물량**(83.6만호)**의 **10~20%**
지분적립형 분양주택	집값의 **10~25%**만으로 **내 집**을 **마련**하고, 나머지 집값은 **20~30년 중** 선택하여 **나누어 부담**	
토지임대부 분양주택	일반 분양가에서 **택지비**를 **제외**한 **저렴한 가격**으로 **내 집 마련**(토지는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)	

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(59→97만명'23년)[국토부]

○ **(현황) 청년우대형 청약통장***이 **금년 말 종료 예정**이나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의 **정책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**

* (대상) 만 19세이상~34세미만(병역복무기간 인정), 연소득 3천만원이하, 무주택 청년 (지원)) ① 우대금리 : 연 6백만원까지 최대 **3.3% 우대금리**(5천만원 한도)
② 비과세 : 연 600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**이자소득 비과세**(5백만원 한도) 혜택

○ **(확대/개선)**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**가입기간 2년 연장**(~'23년말) 및 **소득기준 완화**(연 3,000만원 → 3,600만원)를 통해 **지원대상 확대**

* 조특법(기재부),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(국토부) 개정.시행('22.1~)
** (~'21년) 59만명 수혜 전망 → (~'23년) 97만명 수혜 전망(+38만명)

4 다양한 청년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[국토부]

○ **(현황)** 현 매입임대주택제도* 하에선 설계·건설 단계부터 **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시설·서비스 공급에는 한계**

* 국가 등이 건물을 매입·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직접 운영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

○ **(신규)** 다양한 청년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**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직접 설계·건설 단계부터 참여**하는 **테마형 임대주택*** **공급**('21.하)

* (예시)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스튜디오, 코워킹스페이스, 창업실험가게 등 조성

5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[금융위]

○ **(현황)** 자산가격 상승으로 **무주택 청년의 내집 마련 어려움이 가중**됨에 따라 **금융지원 확대 필요**

○ **(신규) 청년·신혼부부***등의 **금융부담 완화****를 위해 **최장 40년 만기의 정책 모기지를 도입('21.7) 후 민간 확대도** 지속 **검토**

*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

** 금융부담 완화 예시(21.7월 기준)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(30년만기, 2.85%) 124.1만원→(40년만기, 2.90%) 105.7만원으로 14.8% 감소

구 분	보금자리론				적격대출
주택가격제한	6억원 이하				9억원 이하
소득제한	7천만원(신혼부부 8,500만원)				제한없음
대출한도	3억원 → 3.6억원 (7.1일부터)				5억원
LTV·DTI	LTV 70%, DTI 60%				은행과 동일
대출금리 ('21.7월 기준)	만기	10년	20년	30년	40년*	3.00~3.84%(은행별 상이)
	인터넷	2.60	2.80	2.85	2.90	

3.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

1 청년 등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행복주택 제도 개선[국토부]

○ **(현황) 행복주택**은 청년,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 중이나, **계약금 부담***, **재청약 원칙적 금지****, **거주기간 제한**(6년) 등에 따른 주거 부담 존재

* '20년 신규 공급 행복주택 26㎡ 기준 임대보증금의 10~20%(평균 270~540만원 수준)

** 세대원수 증감, 대학소재지 변경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타행복주택에의 재입주 허용

○ **(개선) ❶계약금 인하**(10%→5%), **❷재청약 요건완화**(원칙금지→허용) 통한 **입주지원을 강화**하고 **❸통합 공공임대주택*** **공급**을 통해 **주거품질 제고**('21.하)

* 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 통합 → 1인가구 최대 40㎡ 공급+거주기간 30년으로 연장

2 청년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[국토부]

○ **(현황)**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**대학·역세권 인근**은 **원룸·고시원 등 거주환경이 열악**하고, **불법 방쪼개기 성행**으로 소음, 화재위험 노출

○ **(개선) 노후고시원, 상가, 호텔 등 리모델링**으로 **양질의 주택 공급***, **주거상향 선도 지자체**** **확대, 지자체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 확보** 추진('21.하)

* 지원규모 : ('21년) 5천호 → ('22년) 6천호
** 지자체 현황: ('21년) 12개 → ('22년) 15개

3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입주 시기 단축[국토부]

○ **(현황) 사회적 주택*** **운영 기관**이 청년 입주자 선정 시 **자산 검증**에 **장기간 소요**(평균 6~8주)되어 입주희망 청년의 **입주 시기가 지연**

*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(대표사례: 안암생활)

○ **(개선) 先입주 後 자산검증**을 통해 **입주 시기 6주 이상 단축**

4 주거정보 플랫폼(마이홈) 사용자 친화적 기능 개선[국토부]

○ **(현황)** 공공주택 입주정보 등을 제공하는 **주거복지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(마이홈포털)**의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필요

○ **(개선) 입주희망지역 임대주택 모집 실시간알림(Push) 서비스 개선*** 등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**시스템 개선 추진**('21.하)

* 시·군·구 단위 알림(관심지역 복수선택 가능) 제공

5 찾아가는 주거상담·교육 서비스 제공[국토부]

○ **(현황) 온-오프라인 플랫폼**을 통해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**청년의 주거정보 접근성**이 여전히 낮고 **임대차 분쟁시 구제 곤란**

* ▲**(오프라인)** 주거복지센터 107개소(LH 62개소, 지자체 45개소),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2개소(LH·부동산원 각 6개소) ▲**(온라인)** 마이홈포털

○ **(개선)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**하여 대학생 등 청년 대상 **'찾아가는 주거 상담·교육'*** 추진을 통한 **교육·홍보 강화**

* ①청년주택, 청년전용 금융상품 안내, ②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, 분쟁조정 방법 교육, ③온라인 서비스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등

3 복지 · 문화 분야

모든 청년의 “든든한 출발” 지원

◇ 청년의 자산 형성 + 취약 청년별 자립지원 강화

◇ 청년의 정서적 활력 제고 및 모든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발급(31만명)

1.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

지원 대상 및 상품	지원혜택	납입한도	만기수령금
연소득 2,400만원 이하* 청년내일저축계좌	저축액(월 10만원) 정부가 1~3배 매칭	연 120만원 (3년 만기)	3년 후 720~1,440만원
연소득 3,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	저축장려금 최대 4% (1년 2%→2년 4%) 지급	연 600만원 (2년 만기)	2년 후 1,200만원 + 적금금리 +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
연소득 5,000만원 이하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	펀드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	연 600만원 (3~5년)	3년 후 1,800만원 + 펀드수익 + 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

*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요건도 충족 필요

1 (2400만원 이하)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(10.4만명) 복지부

○ (현황) 그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·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지원 대상이 한정적*

* (생계수급자) 청년희망키움Ⅰ, (차상위자) 청년저축계좌 → ’21년 약 1.8만명 지원

○ (신규)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(’22.下)하고 지원대상 대폭 확대(21년 1.8만→22년 10.4만)

- 본인 납입액의 1~3배를 정부매칭으로 지원하여 3년 만기시 최대 1,440만원+이자(수급·차상위)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
지원대상	▲ 기준중위 100% 이하의 年소득 600만원~2,400만원 이하 근로 청년(19~34세) * 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(15~39세)은 年소득 기준 면제
지원내용	▲ 본인 저축액(월 10만원) 대비 1:1 정부매칭 지원 * 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:3 정부매칭지원
만기 수급액	▲ 3년 만기후 720만원 ~ 최대 1,440만원 +이자 수급 (본인 360+정부지원금 360 ~ 1,080)

2 (3600만원 이하) 청년 희망적금 출시 및 비과세[금융위·기재부]

○ (현황) 차상위 이상 청년층의 안정적인 **자산형성 지원제도 부족**

○ (신규) **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**을 위해 **'청년희망적금' 출시**

- **소득기준***을 만족하는 **청년이 적금 납입** 시, **납입액의 일정비율****을 **시중금리에 추가 지급**하고, **이자소득**은 **비과세**(연 납입한도 600만원)

* 총급여 3,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,400만원 이하 ** 신규납입액 2%[1년] → 4%[2년]

3 (5000만원 이하)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[기재부]

○ (현황)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사회 초년생인 **청년들의 목돈 마련 어려움 심화**

○ (신규) **청년***이 **장기펀드****에 가입 시 **납입금액**(연 600만원 한도)의 **40%**를 **소득 공제**하여 **청년층의 중·장기 자산형성 지원**

* (연령) 만 19~34세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(소득) 총급여 5,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,500만원 이하

** (계약기간) 최소 3년~최대 5년

2. 취약 청년 자립지원 강화

1 취약 청소년 ⇨ 자립 청년으로 지원 강화[여가부]

○ (현황) **자립여건이 열악한 취약 청소년들**이 **안정적인 청년으로 자립**할 수 있게 **청소년기** 때부터 자립 지원 강화 필요

○ (확대) ❶**시설퇴소 청소년** 및 ❷**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지원**하고, ❸**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**

* ❶ 주거지원 강화(임대주택 우선 입소 확대)
❷ 맞춤형 서비스 제공(지역자원 연계, 생활도움.법률구조 서비스 등)
❸ 예비학교→직업훈련+특화프로그램→취업지원 단계별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

2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지원 강화[복지부]

○ **(현황)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**하고, 보호종료아동의 **자립기반, 자립역량 및 지지체계** 등 **여전히 열악**

○ **(확대) ①아동 의사를 반영한 보호연장 강화**(18세→24세), **②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, ③자립수당·자산형성 지원, ④**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사례관리 등 **주거지원, ⑤진로·취업 지원** 등 **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**

* ①보호연장,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근거 등 자립지원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('21.下~)
②자립지원 전담인력: ('21) 8개 시도, 자체충원, ('22) 17개 시도, 전담인력 120명 국비지원
③자립수당: ('21) 보호종료 3년내 8,035명 → ('22) 5년내 9,982명
④주거비 등 사례관리 : ('21) 10개 시도, 377명 → ('22) 17개 시도, 1,000명 이상

3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[여가부]

○ **(현황)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조정**(만 24세 → 34세 이하*) 하여 **신규 지원**(8개월)했으나, **안정적인 자녀 양육에는 한계**

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개정('20.10월, '21.4월 시행)
기본 아동양육비 지원 +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 양육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

○ **(확대)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* 지원 기간 확대**(8개월 →12개월)

* 만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의 청년 한부모(만 25~34세) 대상, 자녀 1인당 월 10만원(만 5세 미만)~5만원(만 6세~만 18세 미만) 추가 지원

4 근로장려금(EITC) 지원대상 확대(소득상한금액 인상)[기재부]

○ **(현황)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**도 **EITC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지원**하고 있으나,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**소득상한금액 인상 필요**

*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:
('18)287억원(3만가구)→('19)9,323억 원(107만가구) →('20)9,888억 원(118만가구)

○ **(확대)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인상**(단독 2,000→2,200만원, 홑벌이 3,000→3,200만원, 맞벌이가구 3,600→3,800만원)하여 **청년가구 지원 지속 확대**

5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지속 지원[금융위]

○ **(현황)**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**저소득 청년***들에게 **저금리****로 자금을 지원 중이나, 생활비 등을 위한 **청년층 수요**가 높은 상황

* 만 34세 이하 대학생·미취업청년·사회초년생(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) & 연소득 35백만 이하
** 사회초년생 4.5%, 대학생·미취업청년 4.0%, 사회적배려대상 청년3.6%(보증료 포함)

○ **(지속)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 1천억원 확대**(2,330억원→3,330억원, '21.하)

3.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및 역량개발 지원

1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으로 목돈마련 지원(250만원)국방부

○ **(현황) 금리우대형 장병내일준비적금**을 운영 중('21년말 가입분까지 이자소득 비과세)이나, **장병의 최대 마련가능한 목돈이 다소 작음**

* 현재 개인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자산형성 가능액은 754만원임(육군 현역 기준)
→ (원금) 720만원(40만×18회) + (이자) 34만원(18개월간 단리 연 6%) = 754만원

○ **(신규) 사회복귀시 천만원을 마련**할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**250만원** (병사3:정부1 매칭) **지원** 및 **이자소득 비과세 연장**('23.12.31일까지 가입분)

* 지원규모: ('21년) 無 → ('22년) 25만명

2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(47,000→62,000원)국방부

○ **(현황) 병장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원훈련 보상비* 지급**으로, 예비군 참여로 **생업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불만 누적****

* '21년 단가(28시간) : (병장 봉급) 약 81,520원 / (동원훈련보상비) 47,000원
** 동원훈련 참가자 종사업종('18년) : 회사원 28%, 취업준비 19%, 서비스업 16%, 학생 9%, 자영업 6%

○ **(확대) 동원훈련 보상비를 인상**(47,000원→62,000원)하여, 청년들의 **생업 피해 최소화** (연간 **약 43만명 수혜** 기대)

3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국방부

○ **(현황)** 장병들이 복무 중 자기개발 및 학업중단 해소를 위해 **역량개발을 지원 중**이나, **지원규모가 제한적**(現 병사 70% 지원)

* ▲소요비용 일부 지원(1인당 연 10만원 한도, 본인부담 20%)
▲원격강좌 수강을 통한 학점인정 지원(학기당 6학점, 12.5만원 한도 내 수강료의 50%)

○ **(확대)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***하고, 온라인 **원격강좌 참여대학 및 수강료 지원 확대****

* ▲지원대상 확대 : 병사 정원의 70% → 100%, ▲1인당 지원액 확대 : 10 → 12만원
** ▲참여대학 확대 : ('20년) 161개 대학 → ('21년) 173개 대학
▲수강료 지원 비율 확대 : 수강료의 50% → 80%

4. 청년의 정서적 활력 제고

1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신설(1.5만명)복지부

○ (현황) 20·30대는 심리적지지 기반이 약하고, 정신건강 상담건수도 급격히 증가*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확대 필요성 높음**

* 20·30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건수(비율)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
<20대> ('19)11.6만건(15%)→('20)22.4만건(20%) <30대>('19)10.7만건(14%)→('20)21.1만건(19%)
** 현재 시범사업 형태(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內 포함)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중
↳(지역) 서울 노원, 경기 광주, 전남 해남, 전북 완주 등 16개 기초자치단체

○ (신설)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(월 20만원<본인부담금 2만원>, 3개월) 사업*을 신설, 전국으로 확대하고, 3개월 간 주 1회(월 4회)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

* 지원규모 ('21년) 16개 기초지자체 205명(6월 기준) → ('22년) 전국 자립준비청년 등 15,000명

2 청년층 등 대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17개 시·도로 확대복지부

○ (현황)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, 국민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20·30대 우울 위험군, 자살생각률이 높게 나타남

* **(우울 위험군)** **20대 30.0%, 30대 30.5%** vs 전체 평균 22.8% vs 60대 14.4%
* **(자살 생각률)** **20대 22.5%, 30대 21.9%** vs 전체 평균 16.3% vs 60대 10.0%

○ (확대) 청년 조기중재센터* 설치 추진('22~), 상담·자조활동 지원 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('21. 12개 → '22년 17개 시도)

*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(소)년(15세~34세)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·치료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으로의 이행 및 만성화 예방

- 모바일 등 비대면 심리지원*을 강화('21~)하고, 대학교·병무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우울증 등 조기발견·지원

3 청년 등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여가부

○ (현황)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청년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·고립 방지 프로그램* 운영 중이나 소외 청년 증가 우려

* 독립생활 준비교육, 자조모임, 소셜다이닝 지원 등

○ (확대) 지자체 재정지원을 통해 지자체별 1인가구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 확대 추진('22~)

* '22년) 12개소, ('23년) 32% 이상 167개소 증, ('24년) 31% 이하 50개소 증(총 229개소)
* 지원규모 : ('21년) 無(국비 미지원) → ('22년) 12개소(국비 지원)

5. 청년층의 문화향유 및 창작활동 기반 내실화

1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(10만원) 100% 지원(31만명)[문체부]

○ **(현황)** 저소득층 청년의 **문화예술·여행·체육 활동**을 위해 **문화누리 카드**를 **지급**하고 있으나, **일부 저소득 청년은 미지원**(지급률 77%)

* 지원대상: 저소득 청년 (19~34세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)

** 지원규모: ('20년) 9만원, 24만명 → (''21년) 10만원 25만명

○ **(확대) '22년부터 모든 저소득층**(기초·차상위) **청년**이 **문화누리카드를 사용**할 수 있도록 **지원규모 확대**('21.7월 25만명 → '22년 31만명)

2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(1.5→2.1만명)[문체부]

○ **(현황)** 코로나19 등으로 **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**하면서 **창작준비금*** **신청건수는 급증**하고 있으나, 인원제한으로 선정률 하락

* (대상)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합산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이내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
(지원) 일반예술인 3백만원(격년제), 신진예술인* 2백만원(생애 1회) 지원

** (선정률) ('19년) 60.9%, ('20년) 50.2%, ('21년) 57.4%

○ **(확대)** 최저 소득구간에 해당되나 선정인원 제한으로 **탈락이 불가피했던 예술인(+2,000명 규모)대상, 내년부터 창작준비금 추가 지원**

* 지원규모: ('21년) 1.5만명 → ('22년) 2.1만명

3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 문체부

○ **(현황)** 예술계 종사자(전공자) 증가 및 코로나19에 따른 공연기회 감소 등의 영향으로 **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정책지원 수요*** **급증**

* 아르코 신청자수 : '19년 110건(경쟁률 5:1) → '20년 227건(7:1) → '21년 108건(20:1)

○ **(확대) 청년예술가*의 창작준비, 기획전시, 작품발표**(1인당 평균 천만원) 등을 지원하는 **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**('21년 108건→'22년 196건)

* 문예위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

4 웹툰 융합센터 조성 문체부

○ **(현황)** 청년 선호가 높은 **웹툰 산업의 활성화** 및 **창작 여건 개선**을 위해 **웹툰 융합센터**(경기도 부천시) **건립 중***

* 웹툰융합시설 조성(총사업비 500억원, 국비 120억원) / 준공 및 입주 ('22년 말)

* ▲만화·웹툰 작가 공간, ▲웹툰 및 2차 콘텐츠 기업 공간, ▲학회 및 대학 공간, ▲창작교육지원 시설 조성 등

○ **(지속) '22년 내 웹툰 융합센터를 준공하여** 창작 및 산업화 기반 강화

사례 저소득층(기초, 차상위) 대학생 청년이 받는 혜택은

☞ 교육, 복지, 문화분야에서 **年 1,462.4만원 실질소득+α 지원 → 격차 해소 및 동등한 출발선 보장**

대학 등록금	자산형성	문화활동	주거 · 생활비	합계
700만원 (국가장학금)	360만원 (청년내일저축계좌)	10만원 (문화누리카드)	392.4만원 (주거급여)	**1462.4**만원+**α***

* α : ▲(**월세바우처**) 월 20만원 1년간 ▲(**근로장려금**) 근로활동시 단독가구 최대 150 수령 가능
▲(**햇살론유스**) 1인 최대 1,200만원(3.5% 대출금리) 서민금융 지원

4 교육 분야

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

◇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실현

◇ 비진학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확대

1. 서민·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

1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부

○ **(현황) 국가장학금**을 **차등 지원**(학자금지원 8구간* 이하) 중으로 **예산 총액 수준에선 반값등록금 실현**했으나 개인수준에선 지원구간별로 지원액 차이가 커 **서민·중산층의 체감도 부족**

*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
○ **(확대) 5~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**해 **개인수준에서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달성**(연간 56.2만명)

* 5, 6구간 368만원 → '**390만원**' / 7구간 120만원, 8구간 67.5만원 → '**350만원**'

** 국가장학금 규모(조원) : ('21) 4.0 →('22) **4.7(+0.7)**

- 특히 **기초·차상위 가구**에 대한 **지원은 대폭 강화***(연간 17.5만명)하고, 대학생 자녀가 많아 부담이 큰 가구의 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(기초·차상위 둘째, 8구간 이하 다자녀 둘째·셋째 전액 지원, **연간 14.0만명**)

* 520만원 → 첫째 자녀 '**700만원**' / 둘째이상 자녀 '**등록금 전액**'

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(만원)

구분			기초·차상위	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	5구간	6구간	7구간	8구간
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			-	~30%	~50%	~70%	~90%	~100%	~130%	~150%	~200%
'21년	Ⅰ유형		520	520	520	520	390	368	368	120	67.5
	다자녀		520	520	520	520	450	450	450	450	450
							⬇				
'22년	Ⅰ유형		**700** (둘째 전액)	520	520	520	390	**390**	**390**	**350**	**350**
	다자녀	첫째,둘째	**700** (둘째 전액)	520	520	520	450	450	450	450	450
		셋째이상	**전액**	**전액**	**전액**	**전액**	**전액**	**전액**	**전액**	**전액**	**전액**

2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확대(+2.9만명) 및 상환부담 완화(0.2만명) 교육부

○ **(현황) 지원대상이 제한적**(학부생, 성적요건*)이고, 제한적 이자지원, 파산시 비면책 등으로 **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**

* '20년 학자금대출 거절자 중 성적·이수학점 미달자는 13,877명으로 전체의 56%에 달함

** 저소득 청년의 등록금 대출 이자지원은 無, 개인파산시 ICL 대출금 상환책임은 非면책

○ **(확대) ICL 지원대상**을 **대학원생까지 확대**(일반대학원생 등 약 7천명)하고, **대출의 자격 요건 중 성적요건**(C학점) **폐지**(2.2만명 대상)

- **취약계층 대상**(5.7만명) **재학 중 ICL 대출금에 대한 이자면제를 확대**하고,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은 **ICL 원리금도 면책**(2천명)

저소득층.다자녀 가구 ICL 이자지원 강화 주요내용

	현재	확대
기초.차상위	생활비 대출(年300만원) 무이자	재학중 등록금 대출도 이자 면제
다자녀	4구간까지 생활비 대출(年300만원) 무이자	재학중 등록금 대출도 이자 면제(확대) 5~10구간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(신규)
저소득다자녀 대학원생	이자 지원없음	재학중 생활비·등록금 대출 무이자(신규)

2. 코로나 졸업반 비진학 청년 역량개발 지원 및 취업지원 강화

1 (취업전)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[교육부]

○ **(현황)** SW·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수요가 높으나, **현장실습**을 **미운영**하는 기업이 많아 **취업 기회**가 **부족**

* 직업계고 학생 대상 현장실습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중

○ **(신규)** 신산업 분야 **우수기업**과 **협력**을 통한 **맞춤형 직무교육과정**을 **운영**하여 **직업계고 학생** 등 **직무역량 향상·사회진출 지원**('22년 1,050명)

2 (취업후)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강화(1인당 400만→500만)[교육부]

○ **(현황)**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**기업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취업 어려움 증가**(취업전환율 19년 67.5%→20년 64.9%)

○ **(확대) 현장실습생의 취업률을 제고**하기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**지원수준**을 **1인당 500만원***('19년 400만원)으로 **확대**('22년 2.94만명)

3 (취업후)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(1.2→1.5만명)[교육부]

○ **(현황) 고졸 청년**이 **취업 후 역량을 지속 개발**할 수 있도록 **후학습 장학금**을 **지원** 중이나 현장수요 대비 **지원규모 작음**

○ **(확대) 고졸 청년**이 취업을 거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**선취업, 후학습 기회** 및 **지원규모 확대**

* 지원규모 : ('21년) 11,800명 → ('22년) 15,000명

3. 미래 대응형 맞춤형 인재 양성

1 [ICT·SW] SW 중심대학 및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확대[과기부]

○ (현황) SW 인력양성을 위해 현장실습·인턴십 지원하는 SW중심대학* 및 이노베이션아카데미* 등을 **운영중**이나, **수요대비 부족**

* 자기주도 학습 기반 교육과정으로서, 연 500명 수준의 SW 혁신인재 양성

○ (확대) SW인력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**SW 중심대학**(41개→44개) **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원규모**(본교육 선발 500명→750명) **확대**

2 [의약·바이오] 규제과학 및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확대[식약처]

○ (현황) **규제과학 대학 선정, 규제과학연구지원센터 지정***과 함께 **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**중이나 **수요 대비 지원규모 작음**

* ▲의약품(유효성(2개), 안전성(1개)), 식품(기능성(1개), 안전성(1개)) 총 5개 대학 선정
▲규제과학연구지원센터 지정('21.5월)

○ (확대) **규제과학 대학을 확대**(8개 대학 7분야, 100명→170명)하고, **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콘텐츠 다양화***

* 예 : 수준별 의약품 규제업무·안전관리 교육과정 개설, 현장실습 운영 등

- **첨단바이오분야 안전관리 인력양성 지원규모도 확대**

* 지원규모 : ('21년) 50명 → ('22년) 60명

3 [의약·바이오]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인재양성 강화[식약처]

○ (현황) 산업수요를 바탕으로 '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(QbD)'를 기반으로 **제약 스마트공장 혁신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인재 양성중**

○ (개선) QbD 이해도 수준에 따른 **단계별**(기본·심화) **교육 운영체계 구축** 및 **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**

4 [문화] OTT 콘텐츠 특성화대학원 운영지원 신설(21년 0명→22년 50명)문체부

○ **(현황) 글로벌 OTT* 시장 선도 및 K-콘텐츠 경쟁력 강화**를 위해 영상콘텐츠 기획, 유통·마케팅, 기술 융복합 등 **전문인력 양성 필요**

* OTT(Over the Top) :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·영화·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(예 : 넷플릭스, 디즈니 플러스, 왓챠, WAVVE 등)

○ **(신규) 대학 내 OTT·콘텐츠 산업 전문 교육과정(석/박사) 운영** 지원(3년)

* 세부과정(예시): ▲OTT 스토리텔링(트랜스미디어 콘텐츠 등), ▲OTT 비즈니스(지적재산권(IP), 투융자 파이낸싱 등), ▲OTT 테크놀로지(VR·AR, 사운드디자인 등)

5 [관광]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확대 · 강화문체부

○ **(현황) 디지털 기술기반 서비스 고도화** 등 관광산업 환경이 급변하여 **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**하기 위한 **인재육성 사업 필요**

○ **(확대)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인원*을 대폭 확대**('21년 100명→'22년 700명)하고 **미래관광인재교육센터를 조성**하는 등 인재육성 기반 강화

* (대상) : 관광기업/유관기관 종사자, 예비 취·창업자
(내용) 관광+ICT 융합 분야의 이론·실무 연계→미래형 관광 인재 융합 교육 운영

5 참여 · 권리 분야

정책결정 영향력 확대로 청년의 "삶 효능감 제고"

◇ **정책-청년 간 쌍방향 소통 확대** 등 **정책참여 기회 보장**
◇ **법령정비, 정책연구** 등 청년정책 기반 강화

1.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

1 청년참여 2030 확대 국조실

○ **(현황)**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*에 따라 청년들의 정부위원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, **청년위촉 위원회 비율**은 여전히 **낮은 수준**

* '25년까지 정부위원회 중 **청년위촉 대상 위원회 30%, 청년위원 위촉 20%** 계획 수립

구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
중앙부처 청년위촉 위원회 비율	13.9% (135개)	**17.1% (147개)**	**20.3% (174개)**	23.6% (203개)	26.8% (230개)	30% 이상 (258개)

* 전체 정부위원회(857개) 중 청년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(135개) ('21.6월 기준)

○ **(확대)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관리되도록 미지정 위원회를 일괄 지정*** 추진('21.하)

* 정책 대상이 청년과 무관한 경우는 제외

2 청년의제 공론화장 운영 국조실

○ **(현황)** 일자리, 주거 등 청년의 삶과 관련한 **사회 이슈에 대해 청년의 관심은 점차 증가**하지만, 청년이 **직접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수단은 부족**

○ **(신규)** 청년이 **공론화 의제**를 **발굴·제안**, 선정의제는 **공청회, 세미나** 등을 통해 해법을 **모색**하고 정책에 **반영**하는 **공론장 반기별 운영**('21.하)

* 청조위, 관계부처 참여로 정책반영 실효성을 제고

3 온라인 청년센터 개편[고용부]

○ **(현황) 청년정책 정보**가 중앙부처·지자체 등 **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** 청년들의 **정보검색이 불편**하고, **과도한 탐색비용 발생**

* 現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수집·탑재시 많은기간 소요→ 실시간 정책반영 곤란

○ **(개선)**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을 개편, 급변하는 **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**함으로써 **정보검색 불편성 해소 및 탐색비용 절감**

*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체계적인 오픈(OPEN) API 서비스 구축·운영으로 정보수집·최신화 등 부처·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연계

4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정비[국조실]

○ **(현황)** 부처별·지자체별로 **청년정책**을 **전달**하는 **센터**가 **분산·운영**되어 **청년**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로 한계

○ **(개선)** 중앙·광역 단위별로 **거점 청년센터**를 **조성**하고 **지역별 청년센터 간의 연계·협업**이 가능토록 정비, 청년센터 표준모델·운영매뉴얼 등 마련

* 청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육성

5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 확대[고용부]

○ **(현황)**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취·창업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, **지원대상이 대학생으로 제한**되고, **취·창업 외 서비스 수요도 증가**

○ **(개편)** '대학일자리센터'를 **'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'로 개편**하여 **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**(재학생→졸업후 2년내 미취업자) **및 기능 확대**(21년~)

* ①취업지원 전담자 배치 → 기업정보 관리, 채용동향 파악, 일자리 발굴 및 매칭 강화, ②진로·취업지원 상담 중심 → 심리, 생활 등 전문상담 서비스 추가

** ('21년) 대학일자리센터 84개교, 플러스센터 16개교 → (중장기)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0개교

2. 청년 정책 기반 강화

1 청년 관련 법령 체계화[국조실·법제처]

○ **(현황) 청년기본법 시행**('20.8월)에 따라 관련 **법령·조례 정비** 및 기본원칙 수준으로 구성된 **권익증진시책 구체화 필요**

○ **(신규) 청년 권익증진시책 구체화를 위한 법안 마련**('21.하, 연구용역 추진 중) 및 **청년관련 법령 일괄개정** 추진

청년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(우선개정 대상)

구분	주요 내용	해당 법령
최저연령 하향	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(現 20세→19세)	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등
적용대상에 청년 추가	법령상 기본계획, 적용대상 등에 '청년' 포함	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등
응시료 반환 확대	응시자 편의제고를 위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	공무원임용시험령 등

2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[국조실]

○ **(현황)** 체계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**주거·교육·복지·문화·참여** 등 분야 및 **취약계층** 등 **유형별 청년실태 파악 필요**

○ **(확대)** 청년 삶 전반을 종합적·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'22년 **"제1차 청년 삶 실태조사" 실시**

* ('21)표본문항 설계 및 시범조사 → ('22)본조사 → ('23)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지표 개발.조사

3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[국조실]

○ **(현황)** 보사연, 청소년연, 노동연 등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정책을 연구 중이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**전담 연구기관 부재**

○ **(확대) 전담 연구기관 신설 검토** 등 다양한 청년정책 **연구기반 강화** 추진, 과도기적으로 **경인사연 內 '청년정책연구단*'** 운영

* 연구기관 협업(보사연, 청소년연, 노동연, 국토연 등), 4개 분과 운영
→ 외부전문가+민간청년연구단체+청년정책조정위 등과 함께 청년정책연구 활성화

** 향후 기관신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지정 또는 설립 추진

Ⅳ. 향후 계획

1 정책과제 이행 점검·보완 및 홍보

○ **추경, 하경방 등에 포함된 과제**들은 **'21년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집행 및 제도 개선**

○ **법령 개정, 제도 개선** 등 소관 부처별 **정책과제**를 **철저히 이행**

○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**보완사항을 발굴**하여 **'22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**

○ 다양한 **온-오프라인 매체**(청년의 날, 온라인청년센터, 청년친화적 SNS 등)를 통해 **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 자체 홍보 추진**

2 청년, 분야별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규과제 발굴 지속

○ **청년공론화장 운영, 청년과의 소통** 강화 등을 통해 **청년들의 목소리**를 지속 수렴하여 **새로운 정책수요 발굴 및 정책과제 마련**

○ **청년정책연구단 운영**을 통해 청년의 삶을 면밀히 분석하고, **정책 사각지대 및 신규과제 발굴** 지원 등 **정책연구 강화**

○ **기후 위기, 탄소 중립, 녹색정책 등** 새로운 시대조류와 연계된 **청년정책 수요 발굴**

3 구조적 과제 대응은 지속 추진

○ **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지속, 규제챌린지 본격 추진** 등 **청년의 삶에 직·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**를 적극 **발굴·개선**

○ **한국판 뉴딜 2.0**을 꼼꼼히 추진하여 **체감성과를 창출**하고, **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및 격차 해소**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노력

○ 인구감소·지역소멸·초고령사회 임박 등 본격화되는 **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**하기 위한 **전략과제를 지속 추진**하고, 정책과제 추가 발굴

참 고 대상별 정책지원 내용

<table>
<tr><th></th><th>정책지원 내용</th></tr>
<tr><td>청년고용 기업</td><td>
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: 1인당 年 960만원 인건비 지원
2 고용증대세액공제 :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일정금액 세액공제(3년간)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중소기업 (3년간)</th><th colspan="2">중견기업(3년간)</th><th colspan="2">대기업(2년간)</th></tr>
<tr><th>수도권</th><th>수도권 外</th><th>수도권</th><th>수도권 外</th><th>수도권</th><th>수도권 外</th></tr>
<tr><td>1,100만원</td><td>1,300만원</td><td>800만원</td><td>900만원</td><td>400만원</td><td>500만원*</td></tr>
</table>
* '21~'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
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: 1인당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100% 공제(2년간)
</td></tr>
<tr><td>중소기업 취업자</td><td>
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: 5년간 약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
2 중기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: 한도 1억원, 금리 연 1.2%(고정)
3 산단 중기재직자 교통비 지원 : 월 5만원(年 60만원)
4 내일채움공제 성과보상기금(기업기여금) 소득세 감면
(중소 90%, 중견 50% 감면)
5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근로소득세 90% 감면(5년간)
</td></tr>
<tr><td>구직청년</td><td>
1 국민취업지원제도(I유형)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
2 청년도전지원 사업 :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인센티브 지원
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: 취업 성공시 150만원 지원
4 국민내일배움카드 : 5년간 300~500만원 교육비 지원
(대기업, 공무원, 사립교원 등 제외, 모든국민 대상)
5 K-디지털 트레이닝 :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('22년 2.9만명)
6 일경험 프로그램 :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(1만명)
</td></tr>
<tr><td>창업청년</td><td>
1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: 1억원, 선배 창업가 멘토링, 세무·회계 교육
2 테크스타 보증 지원 : 보증한도 6억원, 보증료 : 5억원까지 0.3% 고정
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: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外 5년간 100% 소득세·법인세 감면(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%)
4 청년 다시-Dream 프로그램 :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(6천만원), 멘토링
</td></tr>
</table>

	정책지원 내용
기초 차상위청년	1 **청년내일저축계좌** : 정부매칭 1:3 지원으로 3년후 1440만원 형성 (본인 360만원 + 정부지원금 1080만원) 2 **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** : 기초.차상위 520만원→700만원 3 **ICL 무이자 지원 확대** : 생활비 무이자 → 재학중 학비·생활비 무이자 대학원생도 생활비·재학중 학비 무이자 4 **문화누리카드**: 10만원 문화생활바우처 기초.차상위 100% 지원 5 **햇살론 Youth 대출** : 연 1200만원(금리 : 3.6%(보증료 포함)) 6 **독립거주 20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** : 급여 최대 5.5% 인상(1급지 기준)
저소득층 (일정소득 이하)	1 **중위소득 60% 이하** : **청년 월세 한시 지원**(최대 月 20만원×12개월) * 소득기준 : 가구소득 기준중위 100% & 본인소득 기준중위 60% 2 **연소득 2200만원**(1인가구 기준) **이하** : **근로장려금 지원**(최대 月 150만원) * 30대 미만 청년도 가능 3 **연소득 2400만원 이하** **청년내일저축계좌** : 정부매칭 1:1 지원으로 3년후 720만원 형성 4 **연소득 3500만원 이하** **햇살론 Youth 대출** : 연 1,200만원(우대금리 적용) * 만34세 이하 대학생·미취업청년·사회초년생(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) * 사회초년생 4.5%, 대학생·미취업청년 4.0%, 취약 청년3.6%(보증료 포함) 5 연소득 3600만원 이하 ① **청년우대형 청약통장** : 우대금리, 이자소득 비과세 * ▲우대금리 : 연 6백만원까지 최대 3.3% 우대금리(5천만원 한도) ▲비과세 : 연 600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(5백만원 한도) ↳ 총급여 3,600만원 이하 /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 ② **청년희망적금** : 저축장려금 최대 4%(1년 2%→2년 4%) 지급 ⇨ (2년후 1200만원+시중이자+저축장려금 36만원) 6 연소득 5000만원 이하 ① **보증금 및 월세 대출지원**(20만원까지 무이자) ② **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** : 펀드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 ⇨ (3년후 1800만원+펀드수입+소득공제 720만원)
직업계고 재학·졸업생	1 **현장실습 수당** : 월 60만원(국고) × 2개월 2 **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** : 1,050명 3 **취업연계 장려금** : 취업시 500만원 지원 4 **후학습 장학금 전액 지원** :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, 대기업·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% 지원
장병	1 **장병사회복귀준비금 지원** : 정부매칭 3:1 지원으로 만기시 1,000만원 형성 (본인 720만원 + 정부지원금 250만원 + 이자) 2 **자기개발비**(도서구입비, 시험응시료, 강좌수강료 등) 지원 : 연 12만원 3 **온라인 학점취득 지원**(수강료 지원) : '21년 수강료 50% → '22년 수강료 80% 4 **동원훈련 보상비 인상** : '21년 4.7만원 → '22년 6.2만원